오늘의 시민교육의 현실과 전망 시민교육을 돌아보다



2014. **12.15.**(월)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오늘의 시민교육의 현실과 전망 시민교육을 돌아보다



2014. **12.15.**(월)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심포지엄 순서

개회 사회 이난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국장 14:00~14:20 인사말 박상증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도정일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장 제1부 사회 김민철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2014년 시민교육의 지형변화와 발표1 '진보 교육감' 시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제도 현황 장은주 | 경기도교육연구원 상임연구위원 14:20~15:50 발표2 시민교육을 위한 법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좌세준 | 변호사 토론1 위정희 | 나눔국민운동본부 나눔교육센터장 토론2 주은경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원장

제2부 사회 박영선 | (사)시민 이사
다시 생각하는 시민교육
발표1 시민교육의 성찰과 과제
16:00~17:40 이명원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발표2 2015 시민교육을 위한 MAP(Make, Analysis, Plan)
김미란 | 전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소장
토론1 한숭희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토론2 박홍순 |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토론3 조철민 | 한일장신대 교수

자료집 목차

제1부	06	발표1	'진보 교육감' 시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장은주		
2014년 시민교육의 지형변화와 제도 현황	24	발표2	시민교육을 위한 법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좌세준		
제2부 다시 생각하는 시민교육		_	시민교육의 성찰과 과제 이명원 2015 시민교육을 위한 MAP(Make, Analysis, Plan) 김미란		
	54		심포지엄 주최 기관 소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 사단법인		
	57	2014년 시민교육 포럼 연혁			

제1부 2014년 시민교육의 지형변화와 제도 현황

'진보교육감' 시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장은주 |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١.

이른바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려 13곳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교육감이 탄생했다. 민선교육감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초유의 결과다. 비록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이 결과가 단순히 보수 진영 후보들의 분열 탓이라며 그 의미를 폄훼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탓만은 아니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모든 지역에서 진보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은 4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고, 심지어 20% 가까이 증가한 곳도 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경기도만 진보후보 득표율이 큰 비율로 떨어졌지만, 어쨌든 지금의 진보교육감시대는 주되게는 경기도에서 시작된 혁신교육 운동이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은 결과일 것이다. 그 밖에 세월호 대참사 이후 한국 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이른바 '앵그리 맘'의 표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많았는데, 이 역시 지금의 진보교육감시대가 단순히 보수 진영의 후보 난립 탓만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리라. 어떤 식으로든 '진보 교육'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강렬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진보 교육은 도대체 어떤 교육인가? 진보 교육감의 '진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진보 교육감 시대는 한국 교육의 어떤 결정적인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강렬한 열망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환은, 교육감들이 마주하게 될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제약 때문만이 아니라, 진보 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 때문에도 쉬이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게 솔직한 내 생각이다. 나는 우리 진보 교육감들이 지금 그 병리가 너무도 깊어 이미 그 수명이 다했음이 충분히 입증된 이때까지의 입신출세주의적—메리토크라시적 교육 패러다임을 청소년들의 참된 인간적 성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형성에 초점을 둔 인간적 민주적 교육 패러다임으로 교체해 내려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도를 할 때에만 일말의 성공 가능성이나마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글에서 나는 우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현재의 지배적인 메리토크라 시적 교육 패러다임의 본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진보 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를 비판적으로 살펴본 뒤(II),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둔 '민주주의적 교육 패러다임'이라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III), 마지 막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택해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정책 과제 몇 가지를 제안할 것이다(IV).

11.

지난 9월 초,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광화문 광장에는 최소한의 시민적 양식을 갖춘 이라면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그 농성을 조롱하며 '폭식투쟁'이란 걸 벌였던 것이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최근 『시사인』(367호)은 이런 폭거를 자행한 일베의 회원들, 곧 이른바 '일베충'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분석기사를 내 놓은 적이 있다. 기사에 따르면, 그들은 그저 무식한 '루저'나 '지질이'가 아니라 나름의 논리 체계와 정의 관념을 갖추고 있는 '아주 예의바른 청년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특히 여성, 진보 · 개혁 진영, 호남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무임승차 혐오'라는 모종의 정의감이 표현된 결과다. "여성은 데이트 비용을 내지 않고 남자를 등쳐먹고, 진보는 제 능력으로 성공하는 대신 국가에 떼를 쓰고, 호남은 자기들 끼리만 뭉쳐서 뒤통수를 친다." 한 마디로 이들은 기여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요구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척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들 일베충은 우리 사회 극히 일부의, 예외적으로 비뚤어진 청년들이 아니다. '괴물이 된 이십 대의 자화상'이라는 부제가 붙은 오찬호의 책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2013)에는 그런 일베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고방식을 지닌 우리 사회의 숱한 보통의 이십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도 가령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이 정당한 기여 없이 대가를 바란다며 비판하는데, 마찬가지로 강한 무임승차 혐오 정서를 보이고 있다. 조야하고 역겨운 방식으로 표현되는 소수자에 대한 폭력적 공격만 빼면, 저자에 의해 '괴물'이라고 지칭된 우리 사회의 이 보통의 이십대들과 일베충 사이의 거리는 그리 멀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저자에 따르면 그 이십대들이 그렇게 된 것은 성적이나 능력에 따른 배제와 차별을 당연시 하는 '학력위계주의'에 깊숙이 포박되어 있어서다. 이것은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¹⁾라는 모종의 정의 관념의 한 표현이다. 이 메리토크라시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생활 이데올로기로서, 무엇보다도 특히 숱한 병리를 양산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그 근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베충은

¹⁾ 애초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Michael Young(2008)이 1958년에 출간한 "The Rise of Meritocracy"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능력주의'나 '업적주의' 등과 같은 통상적인 역어는 '능력자 지배체제'라는 말의 본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칫 긍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지게 할 우려가 있어서 그냥 외래어를 쓴다.

이 메리토크라시적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병든 한국 교육의 적자(嫡子)일 뿐이다. 도대체 이 메리 토크라시의 정체는 무엇인가?

메리토크라시는 부와 권력과 명예 등과 같은 사회적 재화를 어떤 사람의 타고난 혈통이나 신분 또는 계급 같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능력에 따라 사람들에게 할당하자는 이념으로,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 일반을 '사실적이면서도 규범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분배 정의의 한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사회전체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또 그런 식의 분배가 '정의롭다'고 정당화되는 사회체제에 대한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서로 얻고자 다투는 사회적 재화를 '기회의 균등'이라는 전제 위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경쟁을 통해 능력과 노력 여부로 사람들에게 분배한다면, 이것은 정말 합리적이고 정의로우므로 누구든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핵심 이념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불평등이 무턱대고 그 자체로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불평등한 상태가 정의롭다고 인식되는 분배 원칙에 따라 생겨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이해에 따르면(장은주 2011; 장은주 2012),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원칙과 결부된 일정한 평등주의적 전제 위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적 분배'를 그 원칙으로 삼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성원들 사이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또 산출한다. 그리고 이런 정당화는 대부분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잘 작동해 온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이념은 사실 서구에서보다는 유교적 동아시아 사회에서 먼저 발전되었고 또 여기에서는 그만큼 오랜 전통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우드사이드 2012).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 들은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과거(科擧) 제도'와 그에 기초한 관료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과거제 도는 적어도 그 이념상으로는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공직을 분배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매우 메 리토크라시적인 인재 선발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참고: 왈쩌 1999:232 이하).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강력 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나의 이해에 따르면,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는 '입신양명'(입신출세주의)의 이념 같은 것이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에토스가 수행했던 역할을 대신했다. 유교적 메리토크라시 이념은 바로 그러한 입신양명의 이념과 결합하여 전통적인 유교적 주체들을 아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근대적 주체로 변모시켜내는 데 기여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완수시키는 데 결정적인 문화적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메리토크라시라는 유교 전통 속의 '잃어버린 근대성'(우드사이드 2012)은 서구의 압박에 따른 근대화 과정에서 새롭게 '재생된' 유교적-근대적 문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유교적 조선 왕조의 정당화 이데올로기이기도 했던 이 메리토크라시 이념은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퇴 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신분제의 철폐라는 조건 위에서 더욱 더 강력하게 사회적 주체들의 실천적 상상력을 사 로잡으면서 우리의 근대 사회 형성에 구성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 이념은 무엇보다도 주체들의 '자기계발의 의지' 같은 것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우리 근대성의 문화적 중심축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보다 강렬한 우리 사회의 교육열은 이런 배경 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메리토크라시적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능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가 있다. 때문에 그런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하고 또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다름 아닌 교육이 오랜 시간 동안 평가되고 축적되는 성적과 학력이라는 매개를 통해 그와 같은 필요에 잘 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의 오랜 과정은 기본적으로 '능력자를 추려내는 경연'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 때 사회는 성적과 학력(및 학벌)을 능력의 증거로 여기고 그것들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자연화'²⁾함으로써 정당화한다. 서구에서보다 더 오래 전부터 메리토크라시적 이념에 따른 분배 체계를 발전시켜 왔던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을 이해하는 근본 패러다임 자체가 더 철저하게 이런 식의 이해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여기서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성적이나 학력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궁극적인 목표는 가능한 한 높은 학력을 얻는 것이며 학교의 궁극적인 사명은 그런 목표 설정을 도와 그 높은 학력을 위한 적격자를 찾아내기 위해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이 되고 만다. 그 결과 사람들의 인생의 질과 전망은 성적과 학력에 따라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것으로 이해되고 또 그런 것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패러다임에서 물질주의와 결부된 학벌주의나 성적지상주의의 지배는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학력과 성적이 돈과 권력의 보증수표로 이해되는 탓이다. 대학서열화, 자사고 및 특목고의 입시학원화, 입시지옥, 사 교육 광풍 등과 같은 교육 병리들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교육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학교에서 올바른 자기실현을 위한 자아탐구나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같은 진짜 중요한 교육적 요소들 이 사라져 버리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다. 학교는 명문대 진학이라는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만을 챙기 고 나머지는 일찌감치 포기해 버린다. 이른바 '교실 붕괴'는 이 교육 패러다임의 단적인, 그러나 가장 추악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교육 패러다임에서는 그와 같은 병리들은 제대로 된 교육 문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교육의 분배' 문제다. 곧 '누가' '얼마만큼' 교육받을지의 문제다. 예컨대 대학 입시에서 공정성과 변별력 같은 것이들 시비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 '교육에 따른 분배'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회적 재화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에 따라' 배분할지의 문제 말이다. 가령 여기서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큰 임금 격차는 너무도 정의롭다.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교육을 사회적 생산 체계에서 특정 개인이 어떤지위를 차지해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만 이해한다. 그래서 공교육조차도 근본적

²⁾ 불평등을 사회 구조와 과정의 귀결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Souza(2008) 참조.

으로는 개인의 성공과 출세라는 사적인 틀 속에서만 바라보게 된다.

흔히 이야기되는 교육에서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메리토크라시적 분배 정의의 이념과 연결된 교육 기회의 균등(평등)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한 고교서열화 정책과 고교평준화 정책의 대결, 다양화란 이름으로 추진된 대학 입시정책이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 기회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는 논란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진보 쪽에서는 능력 경쟁 이전에 학생들의 출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이나 사회적 배경이 그 능력 경쟁에 끼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복지'를 강조하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 갈등 요인이다. 이른바 '반값 등록 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메리토크라시적 교육 패러다임은, 분배 정의에 초점을 둔 그 진보적 버전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쟁 체제에서 승리한 자들의 이데올로기이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승자독식을 정당화하고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 메리토크라시적 이상은 너무 쉽게 경쟁의 승자들이 갖춘 어떤 지위에 대한 형식적 자격(qualification)을 높은 사회적 지위와 재화 같은 것을 마땅히 독차지해도 되는 '도덕적 자격' 또는 '응분'(desert)으로 바꾸면서(참조: 왈쩌 1999, 227이하) 사회적 분배 체계의 극심한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우리 사회에서와 같이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일견 제대로 된 능력주의 사회라도 실현될 수만 있다면 매우 다행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이상은 자칫 이윤이나 부 같은 어떤 생산주의적인 기준만을 따라 평가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무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자의적인 지배를 낳고 정당화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주의 사회의 이상이 기득권 질서의 부당함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맥락에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적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부당한 지배와 권력관계에 기초해 만들어진 우리 사회의 과두특권독점체제의 본성을 은폐하면서 그 체제가 능력에 따른 정의로운 체제라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틀림없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한 분배, 특히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양극화 현상 같은 분배상의 불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불의를 교정하기 위한 진보적 노력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불의한 분배의 틀은 결국 정치적으로 규정되고 고착되었으며 그래서 그교정도 민주적 정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교육은 미래의 시민이 될 학생들에게 자신의 불리한 처지나사회적 불의의 상태를 교정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니, 그런 능력을 우선적으로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메리토크라시적 교육 패러다임은, 그 진보적 버전의 경우에도, 이런 '시민적 역량'의 계발이라는 공교육의 마땅한 참된 초점을 시선에서 놓쳐버릴 우려가 있다. 3)

³⁾ 분배정의를 넘어서는 교육정의의 관점에 대해서는 강희룡 외(2013) 참조.

어쩌면 우리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원칙을 명문화해 놓은 것은 역설적으로 그 만큼 교육이 정치적 논리나 이해관계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큰 탓일지도 모른다. 사실 아직 충분히 자주적인 주체가 되지 못한 상태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의지, 특히 정치적 교화의 시도에 아주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교육적 관점이 언제나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한 당파나 정파의 관점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한 정치적 진영이나 목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미성숙한 상태라 해도 청소년들이 불가침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교육의 근본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진짜로 보수와 진보, 좌와우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 정치 전체가 사실은 이런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진영 논리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야 하기는 하지만, 특히 교육 정치에서는 그 극복이 너무도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이 정치적 진영 논리에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은 또한 그 본성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칸트(Kant 1964/Honneth 2012)에 따르면 정치와 교육은 그 성격도 비슷한 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성상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우선, 정치와 교육은 일종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같다. 정치는 미성숙한 신민들을 자유의 상태로 이끌고 교육은 본성의 충동을 따르는 어린이들을 자유인으로 성장시키는데, 그 과정이 모두 그야말로 예술적이다. 아주 정교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그 예술적 외양의 비슷함만이 둘을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다. 칸트에 따르면 좋은 교육과 공화국의 국가질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는 자유로운 공화국의 시민이 될 수 없고, 반대로 단지 공화국의 자유로운 시민들만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정치적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공적 교육을 올바르게 제도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자유로운 공화국의 공교육은 이렇게 '좋은 시민'을 위한 교육일 수밖에 없다. 우리 『교육기본법』이 그 으뜸 조항인 제2조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함양이 교육의 근본 목적이라고 명토 박아 둔 것도 우리 사회도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한 적어도 법적으로는 좋은 시민을 위한 교육의 당위를 에둘러 갈 수가 없었던 탓이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 원칙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민주 공화국의 헌법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을 기르지 못하도록 막기까지 하는 소극적인 '정치 회피'의 원칙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공화국의 공교육은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자의적인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 그리고 자녀들의 사적인 성공에 대한 일방적인 열망 등에 의해서만 지배당하지 않게끔 하면서. 우리 민주공화국의 존립과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미래 세대를 공적인 제도를 통해 교육하고자 결정했을 때, 그 안에는 교육의 그와 같은 차원의 불가피한 정치성에 대한 인식이 이미 어떤 식으로든 표현되어 있고 또 그것은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승인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원칙은 교육에서 모든 종류와 성격의 정치적 내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지금도 교육 과정 안에 정치적인 주제들이 자리 잡는 것을 완전히 회피하는 것은 원천 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학생들은 진공 속에서가 아니라 늘 정치적 갈등으로 소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민주공화국의 공교육은, 우리 교육기본법도 명시하고 있듯이,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은 그 본성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은 〈교육은 특정한 정파나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략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공적 교육 체계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시민의 육성이라는 근본적인 정치적 목적마저 망각해도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원칙은 교육에서의 정치적 진공 상태에 대한 추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육에서는 정치적 목적보다 교육적 목적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원칙일 뿐, 교육을 정치와 완전히 떼 놓으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특히 우리의 민주적한정 체제 전체의 수호라는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철저하게 당파적이어야 하고, 그 체제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보편적 인권을 철저하게 옹호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의 이와 같은 민주적 중치적 지향을 하버마스의 개념을 빌려 '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에 대한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애국주의는 한 마디로 '민주적 헌정질서의 가치와 원리 및 제도들에 대한 헌신'을 그 핵심으로 한다. 나는 진보적 교육이 지난 정체성의핵심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은 헌법애국주의적 지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진보와 보수를 가릴 일은 아니다. 학교는 우리의 헌법적 원칙과 규범과 가치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소여야 한다. 진보와 보수도 헌법 안의 진보와 보수다. 진보와 보수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대립할 수는 있지만, 진보나 보수가 존립가능하게 하는 민주적-헌법적 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나서 가꾸고 지켜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진보든 보수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한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 보수의 민주주의로부터의 이념적 일탈을 생각할 때, 이런 헌법애국주의적 지향의 바탕 위에서 학생들의 시민적 역량, 곧 우리 교육기본법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함양에 초점을 둔 민주시민교육이 특별히 진보적인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여야 한다.

그와 같은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보수가 지켜내려는 현재의 지배적인 메리토크라시적 교육 패러다임 안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메리토크라시적 교육 패러다임은 심지어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낳은 중요한 문화적 배경을 형성하기까지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이 우리의 미래 시민들에게 각인시킨 메

리토크라시적 학력위계(서열)주의는 시민들 사이의 불평등 및 경쟁의 패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노골적으로 정당화한다. 이런 식의 문화적 환경에서 조야한 메리토크라시적 무임승차 혐오를 기본 코드로 한다는 일베충 같은 극우 세력이 성장한 것이다.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는 모든 시민의 '존엄의 평등'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일종의 형용 모순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완전히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진보 교육은 메리토크라시적 교육 패러다임에서 좀처럼 벗어나려 하지 않는 보수 교육에 맞서 우리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 그 핵심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곧 '민주주의적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려 해야 한다. 이 패러다임에서 민주주의는 교육의 목적이자 대상이며 방법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 교육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교육하며, 민주주의를 〈통해〉 교육해야 한다(Edelstein 2007).

물론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다수결주의 같은 특정 절차나 정치적 제도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모든 성원의 평등한 존엄성에 대한 인정, 인권의 실현, 포용, 상호 신뢰, 연대적 자기-지배 등과 같은 도덕적 이상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는 정치적 지배의 형식이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이상을 구현하고 있는 하나의 삶의 양식이며(존 듀이 2013: 101; 장은주 2014), 학교는 그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민주주의적 교육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비전과 원리와 교육적 일상 전체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틀에 대한 이름이다.

이 새 교육 패러다임은 메리토크라시적 서열화나 불평등의 자연화를 넘어서 모든 청소년들의 존엄의 평등을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불가침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다양한 방향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개개인의 독립성과 다양한 고유성을 존중해야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 지평과 사회적 관행에 거리를 둘 수 있는 비판적 주체성을 고양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렇게 개인의 자율성과 진정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그리고 사실은 이런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기도 하지만, 진실하게 남을 배려하고 사람들 끼리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근본적 성향을 함양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 교육 패러다임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과정을 단순히 능력자를 추려내는 경연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존엄성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토대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계발하여 자기실현을 이루고 민주적 자기지배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등하고 실질적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실현과 민주적 자기지배라는 두 축은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고 보완한다.

이 패러다임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단지 특정한 능력이 모자란다고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장은주 2011).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개념을 학업성적이나 학력 등에만 고정하는 좁

은 메리토크라시적-생산주의적 지평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서열적으로 평가되는 지능이나 성적과 같은 좁은 의미의 능력이 아닌, 모든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나름의 재능과 잠재력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능력을 모든 측면에서 존중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누구든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세울 수 있는 뛰어난 소질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재력 평가의 초점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다. 가령 어떤 소아마비 장애우의 잠재력을 평가하면서 그와 비장애우 사이에 달리기 경주를 시켜 놓고 그 장애우를 재단하거나 그 장애우가 지적인 측면에서는 더 뛰어나다고 추켜세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장애우가 자신의 신체적 한계 안에서도 나름의 인간적 성취를 보이려는 노력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초점이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개개인이 지닌 잠재력의 참된 가치를 인정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성원들의 그와 같은 잠재력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는 원칙적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을 '포용'하면서도 개개인들의 다양한 차이들이 모두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게끔 '개인화'될 수 있어야 한다(Honneth 2003).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누스바움(2011)을 따라 이러한 목적을 쫓는 교육 패러다임을 이윤과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는 지배적인 '성장 중심 (교육) 모델'과는 다른 '인간 계발 중심 패러다임'(44)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IV.

우리의 교육 및 정치 현실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메리토크라 시적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숱한 근본적 교육 병리들을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는 교육의 근본 목적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은 앞서 잠시 살펴 본대로 심지어 사실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에 적대하는 '반시민 적 시민'을 양산해내고 있다고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과 같은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활성화의 가능성은 요원하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와 지향을 이해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민주시민교육은 당위의 차원에서만 강조될 뿐 주변적인 위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메리토크라시적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교육을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인적 자본'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만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 개인 차원에서는 입신출세의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조는 공허한 외침 이상의 것이 되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우리 정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극심한 진영 대립의 현실은 그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목적 실현에 대해 적대적이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이 정치적 당파성이나 이해관계

에 대한 교육의 우선성의 원칙이기를 넘어 아예 교육에서의 정치 회피의 원칙으로 오도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집권 주류 정치 세력은 이런 현실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공동 공약으로 내건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른바 '진보 교육감 시대'가 열리게 되어 얼마간 희망적인 상황 전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정책은 여전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보수 진영에의해 규정되고 있지만, 각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한정된 공간과 계기 안에서나마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와 정치권이 진보적 교육 정책의 실현을 여러모로 방해하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런 맥락에서 이미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 또 관심을 가진 현장 교사들의 네트워크인 '학교 시민교육 전국 네트워크'는 각 시도 교육감들에게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정책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⁴⁾

- I.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지역별 공동연구)
- Ⅱ . 학교민주주의 지표 및 지수 개발 · 운영 (지역별 공동연구)
- Ⅲ. 교육청 내 민주시민교육 담당 부서(팀, 과 등) 독립적 운영
- Ⅳ. 교육청 산하 민주시민교육원 설립과 상시 교사연수 실시
- V. 학교 민주시민교육 전담교사 육성
- Ⅵ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보급 · 활용
- Ⅶ. '민주주의 가치'. '사회 참여'인정 교과서 개발(교육청간 공동개발)
- Ⅷ. 학생사회참여동아리 지원 및 학교시민 사회참여발표 대회 운영
- Ⅳ.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 Ⅱ. 교육청간 민주시민교육협의회 운영

제시된 정책 제안들은 학교 현장의 구체적 문제와 교육의 현상을 생생히 체험하고 있는 학교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학교시민교육전국 네트워크'의 이 정책제안들을 참조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앞으로의 과제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적인 체계와 교육과정을 연

⁴⁾ 이하의 논의는 유신고 교사 정경수의 초고를 토대로 한 것이다.

구 개발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고 여러 정치적, 계층적 입장이 섞여 있는 공간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순들이 충돌하고 여러 사회 문제가 교육을 매개로 드러나는 곳이 학교라는 공간일 것이다. 때문에 민주시민양성이라는 교육적 목표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학교 현장에는 무수히 많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과정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성 공적으로 실천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안팎에서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형성,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의 보장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 등 여러 차원에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장 정착과 학교의 민주적 재구조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두고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항목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의 제정

우리나라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극단적인 정치 공세에 매우 취약한 교육영역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한편에서는 '좌파 교육'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독재 옹호 교육'으로 서로 비방하고 매도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에서의 논쟁과 합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방법 및 제도적 지원 장치 등을 규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가능하다면 국회 차원의 법률 제정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경기도와 같이 정치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는 조례(가칭 '학교 민주주의 확립과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조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의무화(필수화) 및 그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함께 학교 민주주의의 신장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으로 재구성되고 학교 문화가 민주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동반 되어야 한다.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적 제도가 마련되고 민주적 혁신적인 리더십 형성을 위한 지원 등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 점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학교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학교 민주주의가 성숙한 방향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교사들은 학교의 권위적 문화와 제도 때문에 학교 현장의 민주적 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무기력 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오동석 외, 2013). 학생들 또한 학생 자치와 참여에 대해 효능감을 상실한 상태이다. 가상으로만 존재하는 학생 자치와 참여활동은 학생들에게 '해 봤자 안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만들었다. 학교에서 교사 스스로 시민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형성되고, 학생도 학교 공간에서부터 현재의 시민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와 문화 속에서 교사와 학생은 자신들의 일상적 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시민으로서 인식하고 시민으로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4년 1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하여 민주 시민 교육의 보장과 지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장을 대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일 뿐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경기도나 정치적 상황이 허락하는 기타 시도에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두고 학교 안의 시민인교사와 학생에 대한 시민교육의 권리 보장, 지원과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위한 조성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조례에는 학교 민주주의의 목적과 방향, 학교 내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민주적 원칙, 학교 내의 민주적 시민으로서 각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각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관한 내용, 학생의 자치와 참여에 관한 구체적 권리 내용, 각 회의 기구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원칙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민 주시민 교육의 목적, 원칙, 내용과 방법,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위원회 의 역할 등을 규정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은 사회적 정치적 환경 변화에 영향 받지 않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과라는 독립된 부서를 두고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초·중·고용 인정교과서까지 발행한 경기도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타시·도 교육청에서도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촉진 및 견인 할 수 있는 계기될 것이다.

(2)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

영국에서는 1998년 '시민교육'이라는 필수 교과를 도입할 때 정부 차원에서 '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시민교육의 목표와 목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 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학교 시민교육과 민주주의』(일명 'Crick's Report')를 토대로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영국의 예와 유사하게 가칭 '학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노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조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그와 같은 자문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지난 6월의 지방 선거에서 13개 지역 교육감들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공동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던 바, 이와 같은 자문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원할 민관 협력적 단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하여 각 시

도 교육청은 지역 단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단위 자문위원회의 상호 협력과 연결을 통해 전국적 차원의 통일 기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민주시민양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지역 단위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문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학자, 교사,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등 각 지역별로 민주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진보와 보수 양 진영 모두를 아우르는 방식이면 더 좋을 것이다. 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필요성, 원칙, 목적, 내용과 방법, 교사 연수와 교재 개발, 지원방안, 후속기구 운영 등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 위촉할 경우에는 교육감 협의회)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와 같은 보고서는 각 지역 교육감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자의성이나 정치성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예상 되는 공격에 대한 커다란 우려 없이 각 급 학교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이자 지침 이 될 것이다. 각 지역 교육청은 자문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 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 게 보고서의 권고 사항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나아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 과제들을 제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 문화, 지원체계와 방향 등에 대한 연구 용역 발주(예: 수도권 교육청 공동연구 및 공동적용)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예 충북·충남·세종·대전 등) 곳을 묶어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민주화와 학교시민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회 방식이 아닌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 권한을 갖춘 다른 방식의 후속기구를 논의하여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또는 그 후속 기구)는 경기도 지역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제안함으로써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 지역 단위의 자문위원회가 협의와 공동 정책 마련 등을 통해 전국적 차원으로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 인식틀에 따라 확산시킬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와 전국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기관(자)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사회와 학교 현장이 결합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위원회는 그 동안 우리 시민사회가 갖추어온 시민교육의 경험과 역량, 교육 컨텐츠를 학교 민주시민교육으로 안으로 이전시키는 교량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및 운영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시작되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실의 학교 안팎의 상황을 잘 파악해 보아야 한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현재'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구체적이고 실천적 의미를 지닌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는 학교 민주시민교 육을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학교와 교육은 민주주의에서 시작하고 민주주의에 의해 견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및 관리자들의 민주주의 실천 정도가 체크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은 이미 늦은 감이 있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학교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와 직원 모두가 가령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성', '남녀 평등',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 '인간과 환경의 공존', '세계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과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실천해야 함으로 밝히고,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과제를 설정해야 할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각 급별 학교에서 민주주의 향상을 위한 행동의 기준점을 명확히 하여 학교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학교민주주의의 수준을 수시로 점검하여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개별 학교의 민주주의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지수 개발과 적용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격려와 견제 속에서 구성원들의민주주의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제도적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 민주화의 심화에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및 교과서 개발의 지속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더불어 사는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경기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초등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인정도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4종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여 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현장 교사 중심의 집필진을 구성하여 현장 적용성이 높도록 개발되었고, 기존의 교과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회 현실 소재를 직접 반영하며, 나아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논쟁과 실천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

나 이 교과서의 개발은 일회로 완결될 수는 없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원칙과 방법, 현장 사례 연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교과서의 활용성을 더욱 더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개발된 교과서는 초등 3~4학년용, 초등 5~5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등 4종으로 그치고 있다. 영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학년별로 별도의 민주시민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풍부하며 청소년들의 각 발달단계에 맞추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후속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발된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주제들, 예를 들어 생태. 통일, 세계평화, 반부패 등의 내용 같은 것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교과서와 민주시민으로서 실천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사회 참여'와 같은 주제를 집중적으로 따로 다루는 교과서의 개발도 필요하다. 지금의 학교 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하면서도 지식 교육 또는 문자 해석 교육 이상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 가치를 생활 세계와 밀접하게 연관 지어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암기하고 습득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가치를 더집중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합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서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러한 다양한 보완적 교과서의 개발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의 폭을 넓히고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실천을 통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지침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5) 가칭 '민주시민교육 연수원'의 설립과 운영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성패는 교사 교육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교육적 명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교사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실제로는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민주적 교육환경 속에서 교사로 성장하지도 못했다.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을지 크게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육성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가칭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여 상시적으로 수준 높은 교사 연수를 실시해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해 가야 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일반 시민이더라도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7일 이내로 내고 정치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만이라도 수준 높은 연수를 통해 민주주의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 교육원은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연구 기능을 병행하여 이론적 기반을 형성함과 동시에 실천적인 교육 역량을 쌓아가야 한다. 교사 연수의 내용은 교육과정 개발기획단을 구성해서 지식, 덕성, 기술이 모두 포괄되도록 개발하되, 교육청 및 일선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교사집단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형해화(形骸化)를 고려해 볼 때, 교육원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선임하여 연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교육원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가칭) '학교 민주시민교육 책임 교사'(이하 책임교사)를 양성해 내야 한다. 책임교사는 학교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조정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교과 간 융합, 학년 통합 교육과정 재구성 등 기존 교과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는 달리 매우 유연하게 운영하여 현장 적합성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책임지고, 교사 간, 교과 간 연계를 위해 협력 작업을 이끌어 효과적인 학교 단위 민주시민교육이 될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맡을 교사가 필요하다. 이 교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수준 높은 이해와 민주적 자질과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책임교사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학생들에게 효능감을 갖게 할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학생이 자치와 참여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할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책임교사는 학생의 자치와 참여의 현실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자치와 참여 활동의 실천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지식, 경험, 덕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영국 학교의 경우 학교당 1인 이상의 학교 시민교육 '코디네이터'가 활동하며, 이들을 위한 업무 지침서(The Citizenship Co-ordinator's Handbook)도 발간하여 학교 시민교육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책임교사를 한 학교당 최소 1명씩 둠으로써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화, 효율화, 집중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교육원에서는 학교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위해서 교장, 교감, 행정직원 및 교육청 직원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특히 학교 관리자급 교사들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은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환경적 조건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교육공무원, 교사,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과정, 심화과정, 특별 주제과정 등을 개설하고 참여자의 환경을 고려해서 다양한 일정과 방식으로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과 운영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내실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며, 교사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과 덕성 및 기술적 역량을 제대로 함양하여 존경받는 교육 공직자의 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 민주시민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희룡 외(2013). 『경기교육의 정의론적 기초』, 경기도교육연구원.

곽병찬(2014), 「거짓의 문화, 진실의 문화」, 한겨레, 2014, 08, 29,

김용옥(2014), 「'혁신 교육감 시대'를 위한 도올의 '교육입국론'」(1: 총론), 한겨례, 2014. 06. 19.(인터넷판) 백병부 외(2013). 『경기도 혁신고등학교 성과 분석』, 경기도교육연구원.

심성보(2013),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실천 과제」, 2013 학교민주주의 박람회 기조 강연, 경기도 교육청.

오동석 외(2014), 『학교민주주의 구조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경기도교육청 연구보고서.

오찬호(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20대의 자화상』, 개마고원,

윤구병(2014), 「늦어서 미안하다」, 한겨레, 2014, 09, 04.(인터넷판)

- 이찬승(2014a), 「세월호를 닮아가는 한국 교육,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공교육 희망 칼럼 38회,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4, 05, 14,
- 이찬승(2014b), 「인성교육진흥법 접근방법에 문제 있다!」, 공교육 희망 칼럼 41회,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2014, 06, 03,

인디고서원(2014) 엮음. 『새로운 세대의 탄생: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의 의무』, 궁리.

장은주(2011), 「한국 사회에서 '메리토크라시의 발흥'과 교육 문제: '민주주의적 정의'를 모색하며, 『사회와 철학, 제 21 집,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1

장은주(2012), 『정치의 이동: 분배정의를 넘어 존엄으로 진보를 리프레임하다』, 상상너머, 2012.

장은주 (2014), 「민주주의라는 삶의 양식과 그 인간적 이상: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사회와 철학』, 제 27집.

홍석노 외(2013),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로널드 드워킨(2012).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홍한별 옮김, 문학과 지성사.

존 듀이(2013), 『민주주의와 교육(/철학의 개조)』, 김성숙/이귀학 옮김, 동서문화사,

알렉산더 우드사이드(2012), 『잃어버린 근대성: 중국, 베트남, 한국 그리고 세계사의 위험성』, 너머북스.

마이클 왈처(1999),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의의 영역들』, 정원섭 외 옮김, 철학과 현실사.

OECD(2008), 『핵심역량 정의 및 선정 프로젝트(DeSeCo Project) 요약)』, OECD 연구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 Edelstein, W. (2007), "Demokratie als Praxis und Demokratie als Wert berlegungen zu einer demokratiep dagogisch aktiven Schule", In: LISUM (Hrsg.), Demokratie erfahrbar machen demokratiep dagogische Beratung in der Schule.
- Gutmann, A. (1987), Democratic Educ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Himmelmann, G. (2000), "Integration durch Wertebildung oder durch Ein bung von demokratischen Verhaltensweisen? Ein Beitrag zum Konzept Demokratie-Lernen\", In: G. Breit/S. Schiele (Hrsg.), Werte in der politischen Bildung, Bundeszentrale f r politische Bildung
- A. Honneth(/N. Fraser)(2003), Umverteilung oder Anerkennung? Eine politisch-philosophische Kontroverse, Frankfurt/M..
- Honneth, A. (2012), "Erziehung und demokratische ffentlichkeit: Ein vernachl ssigtes Kapitel der politischen Philosophie", Zeitschrift f r Erziehungswissenschaft, 2012, 15.
- Kant, I. (1964), ber P dagogik. In: Werke in zw If B nde (Bd. XII), Frankfurt/a, M., Suhrkamp.
- Ravitch, D. (2012), "Schools We Can Envy", The New York Review of Book, March 8 2012.
- Souza, J. (2008) Die Naturalisierung der Ungleichheit. Ein neues Paradigma zum Verstaendnis pe ripherer Gesellschaften, Wiesbaden.
- Wikipedia(2014), "character education" (2014. 9. 21.일 접속)
- Young, M. (2008), The Rise of Meritocracy. 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London, 2008(11th edition; 『교육과 평등론: 교육과 능력주의 사회의 발흥』, 한준상/백은순 옮김, 전예원, 1986년).

시민교육을 위한 법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좌세준 | 변호사

1. 개요

「시민교육을 위한 현행 법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 던져져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었던 '시민교육의 법제화'를 포함한 '시민교육의 제도화' 가 일정한 결실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발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①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었던 '시민교육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 ②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 시민교육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 법률과 시민교육의 법제화와의 관계 설정, ③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의 시민교육 지원 현황과 법제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사점 등을 검토하고, ④시민교육의 법제화를 포함한 시민교육 제도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에 있다.

본 발제에서 사용하는 '시민교육의 법제화'라는 용어는 「시민교육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시민교육의 제도화'는 시민교육의 '법제화'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기구), 인적 물적 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이 일정한 틀을 갖추어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시민교육 법제화'를 위한 논의의 현황: 3개 입법안을 중심으로

가. 1997년 이후 국회에 제출된 3개 입법안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 및 제도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7, 10, 경실련, 참여연대 등 11개

단체가 '민주시민교육포럼'을 구성하고,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작성, 국회에 입법청원을 시도하면서부터 이다. 1) 이후 1997년(15대 국회), 2000년(16대 국회), 2007년(17대 국회), 3회에 걸쳐 국회에 시민교육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안이 제출되었으나. 3개 법안은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하에서는 시민교육의 법제화 논의와 관련하여, 1997년 이후 국회에 제출되었던 위 3개 입법안의 개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시민교육의 법제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1997년 법률안(박명환 의원 대표발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2

(1) 제안이유

「세계 각국이 탈냉전 하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한 국제화, 개방화와 정보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남북관계는 아직도 냉전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화는 안정된 민주적 질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처럼 부단한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개혁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 각 사회집단, 정당,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통적,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요소들을 극소화하고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현대적, 민주주의적 정치문화 요소들을 극대화하여 21세기 국가 간의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민주적 정치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확대, 지방화시대에 있어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련활동의 정당성 부여 및 재정적 지원근거 확보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고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를 위하여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 하에 민주시민교육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① 교육의 대상은 가정, 학교, 교육단체 그리고 사회단체 및 정당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 (제2조)
- ② 교육 담당자는 민간, 정부 및 정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로 함 (제4조)
- ③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u>국회 소속으로 초당적인 민주시민교육원</u>을 둠.(제9조) / 재단법인 규정 준용 (제19조)
- ④ 교육원은 원장과 부원장 포함 11인 이내의 이사와 약간 명의 감사를 둠(제9조)
- ⑤ 교육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함(제10조)
- ⑥ 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둒(제13조)

¹⁾ 신형식,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60~161p.

²⁾ 박명환 의원 외 50인 발의 : 이하 '1997년(안)'이라고 함

- ⑦ 교육원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자문위원회를 둠(제14조)
- ⑧ 교육원은 3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제15조)
- ⑨ 국회는 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u>출연금</u>(제16조), 교육원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제16조)

(3) '1997년(안)'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시민교육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교육의 내용

1997년(안)은 제3조 제1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①개인의 민주적 가치관, ②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민주적 정치제도, ③민주적 전통사상의 계승 발전, ④경제윤리와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⑤환경, 여성, 문화에 대한 이해, ⑥정보화, 지방화 및 국제화에 대한 이해, ⑦안보문제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⑧국제관계에 대한 이해. ⑨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교육 법제화를 위한 법률안을 구상함에 있어, 시민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법으로는 1)시민교육에 대한 포괄적 정의 규정만을 두는 방법, 2)시민교육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유형화하여 규정하는 방법, 3)위 1)과 2)의 규정을 모두 두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1997년(안)에서는 위 2)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은 예컨대 ④항의 경우 현행 「경제교육지원법」, ⑤항의 경우 「환경교육진흥법」, 「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교육), 「문화예술교육지원법」, ⑦항의 경우 「통일교육지원법」 등과 그 교육 내용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입법기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교육의 법제화 과정에서 "시민교육의 내용이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명제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3항에서도 살펴볼 것이지만, 향후 시민교육의 법제화 과정에서는, 현행 개별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고 시행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 관련 법률과 '시민교육'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민교육 담당기구

1997년(안)은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담당기구로 국회 소속의 '민주시민교육원'(이하 '교육원')을 두고, 교육원 운영에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므로 교육원 원장과 부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원의 주요 업무로는 ①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정책수립, ②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육성, ③민주시민 교육 담당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④민주시민교육 관련 조사 연구, ⑤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

력 조정, ⑥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구결과 출판 및 발표, ⑦민주시민교육 관련 국제협력사업, ⑧기타 민주시민 교육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

7인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학술자문위원회는 교육원 산하 위원회이고, 주된 업무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정책 수립이다. 학술자문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교육원 이사회가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구도이다.

별도의 지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조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향후 시민교육 법제화 과정에서, 시민교육 담당기구의 위상이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1997년(안)과 같은 단일기구(교육 원 등)형 이외에도 단일기구와 지원센터 복합형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 가든 중앙기구 와 지역(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단체 등)과의 네트워크와 지원체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예산 및 경비

국회 소속의 '민주시민교육원'을 두는 안이므로, 교육원의 설립 운영을 위한 출연금이나, 교육원 설립 이후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위 법률안에 첨부된 법률시행을 위한 「예산명세서」를 보면, 1998년~1999년도 수지예산으로 68억 2,000만원(인건비 17억 2,000만원+사업비 29억 원+경상운영비 19억 원+예비비 3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사업비 산정의 구체적 내역으로는, 공청회(15회), 워크샵(20회), 국제학술회의(1회), 해외자료조사, 시청각자료 제작, 각국 정치의식조사, 연구논문 보고서 출판, 민주시민교육자료집(월간) 발간, 학술지(월간) 발간, 각급 학교 교육지침서 제작. 교육원 개원 프로젝트비, 관련 시민교육 대상단체 훈련보조금, 자체 교육훈련비 등에 소요될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시민교육은 '법제화'된 이후에도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지원 및 예산의 집행이 필수적이다. 시민교육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법률안 마련을 위한 노력(체계적인 조문화 등)도 필요하지만, '법제화' 이후 효율적인 재정지원 및 예산집행이 가능한 조직 형태와 사업방법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2000년 법률안(김찬진 의원 대표발의): 「시민교육진흥법(안)」3

(1) 제안이유: 요지

「민주주의 국가와 그 사회는 국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국민은 이에 필요한 의식과 체질을 갖추어야 한다.

³⁾ 김찬진 의원 외 29인 발의 : 이하 '2000년(안)'이라고 함.

아무리 국가가 민주적인 제도와 기구를 완비해 놓고 있더라도 국민의 생각과 행동이 그에 미치지 못하다면 그 것은 장식물에 불과하게 된다. <u>국민의 민주주의 의식과 자질을 향상</u>시키기 위해서는 <u>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u>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단체 사이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민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교재를 만들어 보급하는 한편 시민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자격을 정하고 그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교육은 정부가 직접 시민교육전담시설을 운영하거나 다른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전개할 수도 있고, 또한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시민교육의 진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민단체에 의한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 ① "시민교육"이라 함은 국민이 선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식과 자질을 가지도록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 (제2조)
- ②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적 민족통일의 실현에 기여하여야하며,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거나 개인적 정치적 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제5조)
- ③ 시민교육은 시민교육위원회가 주관하되, 각급 교육기관 및 시민단체 등도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제6조)
- ④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의 시민교육에 관한 주요정책의 심의 조정 등을 위하여 중앙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시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함(제7조)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민교육지원단**을 두고, 지원단에는 지원단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둠(제12조).
- ⑥ 시민교육의 방법연구 및 교재개발과 교육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시민교육센터**를 둠(제13조)
- ⑦ 시민교육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민교육평가위원회**를 두며, 평가위원회는 <u>국회 교섭단체가 그</u> 의석비율에 따라 추천한 7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 함(제14조).
- ⑧ 시·도의 시민교육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등 시민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시민교육위원회**를 둠(제16조)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에 시민교육에 필요한 <u>행정적인 지원</u>을 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u>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u>할 수 있고, <u>국·공유재산을 무상 대부</u>하거나 <u>사용·수익</u>하게 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법인은 시민교육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 등에 금전 기타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이 경우 증여상속세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 받을 수 있음(제21조 내지 제23조)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또는 각종사업체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에게 시민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휴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제24조)

(4) '2000년(안)'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시민교육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1997년(안)과 비교할 때 진전된 법률안이라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①제5조 (시민교육의 기본방향)에서 시민교육을 「개인적 정치적 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②시민교육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민교육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지방(특별시, 광역시, 시·도)에도 지방시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점,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 경비지원 규정과 개인 또는 법인 기부자에 대해 조세감면의 근거규정을 둔 점 등이다.

다만, 시민교육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기구인 '중앙시민교육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있는 점,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 11인 이내로 하면서 5인의 위원을 행정부처 장관(통일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의결권을 행정부에 의존하도록(11인의 위원 중 총리 와 5인의 행정부처 장관 포함 6인이 행정부처 소속)한 점 등은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시민교육의 법제화 과정에서 시민교육담당기구와 행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시민교육 담당기구의 구성이나 의결권 행사 영역에서는 그 역할을 최소화(또는 금지)하고,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연방정치교육센터, 이하 '연방정치교육원')⁴의 운영 형식처럼 교육원(센터) 자문위원회에 행정부 대표자들이 참석할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라. 2007년 법률안(이은영 의원 대표발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5)

2007년(안)은 제안이유, 법안의 내용 등이 1997년(안)과 사실상 동일하다. 법률안 시행을 위한 예산 추계서 정도를 참고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으로 법 시행 1차 년도인 2008년도에 47억 원, 2009년도에 72억 5천만 원, 2010년도에 91억 7,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4) &#}x27;Die 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은 통상 국내 문헌에서는 '독일연방정치교육원' 또는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으로 번역되어왔는데, 본 발제문에서는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⁵⁾ 이은영 의원 외 14인 발의 : 이하 '2007년(안)'이라고 함.

마 3개 법률안과 관련한 총평 및 시사점

1997년 이후 3차례에 걸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보고서나 심사보고서 등을 통한 비중 있는 검토 절차도 없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는 정치권(국회)이 시민교육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무관심' 상태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이나,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정치적 지형의 변화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른 소극적 대응, 시민교육의 법제화에 대한 대중과의 공감대 형성 부족, 시민사회 내부에서 시민교육의 법제화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는 입법안 제출에 앞서 기존의 3개 법률안이 담고 있는 장단점을 명확히 평가하고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국회와 행정부처와도 상호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시민교육의 법제화와 중첩될 수 있는 개별 관련 법률 등과의 관계 설정

가, 시민교육의 법제화와 중첩될 수 있는 개별 관련 법률 현황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 시민교육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시민교육의 내용이나 영역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개별 법률로는, 통일교육지원법, 평생교육법(사회교육), 문화예술교육지원법, 환경교육진흥법, 법교육진흥법, 경제교육지원법, 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교육),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나. 시민교육의 법제화와 개별 관련 법률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

시민교육의 내용이나 영역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다. 예컨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경우, 설립(1952년 설립) 초기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논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공산주의에 대한 논쟁과 관련된 강의와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나, 통독 이후에는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⁶⁾은 시민교육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시민교육의 범주를 설정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민교육에는 민주주의의 운영과 직결되는 정치 및 선거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법률, 인권,

⁶⁾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정치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및 운영실태」(2013. 6.), 8p

성 평등 교육 등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통일과 평화교육 또한 시민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시민교육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시민교육의 법제화와 개별 법률과의 관계 설정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는 시각은 의미있다고 판단된다.⁷⁾

- ① 시민교육 법제화 무용론 : 개별 법률에 의한 교육 활동과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민교육 법제화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 ② 시민교육 법제화를 통한 체계화론: 개별 법률에 의한 교육 활동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일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
- ③ 고유의 시민교육 법제화론 : 개별 법률에 따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활동과 지원과는 구별되는, 예컨대 독일연방정치교육원과 같은 정치교육과 같은 고유의 시민교육을 특화한 시민교육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 ④ 기본법 형식의 시민교육 법제화론: 시민교육의 내용이나 영역을 특정 분야로 국한하지 않고, 시민교육의 통합성과 체계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기본법' 형식의 시민교육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다. 평가 및 시사점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개별 법률들은 헌법 제31조 제1항⁸⁾, 제5항⁹⁾, 제6항¹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개별 법률의 내용 및 시행과 관련해서는 미비점이나 체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②의 관점 또한 고려될 수 있는 법제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각 개별 법률들의 주무부처, 기존의 개별적인 교육 지원 시스템을 단일한 법률로 묶는 방법의 입법에는 주무부처간 의견 조율, 개별 법률의 특수성을 상호 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①의 관점을 논외로 한다면, ③과 ④의 관점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국회에 제출되었던 3 개의 법률안이나, 현재 시민사회 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민교육 법제화는 '기본법' 형식의 시민교육 법제화론의 입장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법제화의 방향을 '기본법' 형식으로 상정하더라도, 법제화 이후 실제 시민교육 과정에서는 ③의 관점에 따른 고유한 시민교육 분야를 특화하여 시민교육을 '제도화'해나가면서, 현행 개별 법률에 근거한 각종 교육과 연계해나가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⁷⁾ 이하 ①내지 ④는, 신형식, 앞의 논문(166~167p)의 내용을 발제자가 소제목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⁸⁾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⁹⁾ 제31조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¹⁰⁾ 제31조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외국의 시민교육 현황과 법제화 사례: 독일을 중심으로

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사례

시민교육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외국의 입법례 등을 검토함에 있어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에 의한 시민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 사례를 살펴보는 이유는, 프랑스나, 영국, 미국의 경우 중앙 정부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반면, 독일의 경우 연방은 물론 각 주별 정치교육원이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로 법제화되어 있고, 그에 따른 시민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연방정치교육원 설치의 법적 근거 및 그에 따른 시민교육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독일의 사례가 향후 우리 시민교육의 법제화 방향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나, 독일의 시민정치교육11)

(1) 연방정치교육원 설치의 법률적 근거

연방정치교육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는 「2001년 1월 24일자 연방정치교육원에 대한 규정(Erlass uber die 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 vom 24. Januar 2001)」이며, 이 규정은 연방 내무부장관이 발령한 내무부령임.(이하 전문)

「2001년 1월 24일자 연방정치교육원에 대한 규정(연방 내무부령)

제1조

- (1) 연방정치교육원은 연방 내무부 산하에 권리능력을 갖지 않는 연방 영조물로서 설립된다.
- (2) 연방정치교육원의 소재지는 본(Bonn)으로 한다.

제2조

연방정치교육원은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민주주의 의식을 확고히 하며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능력을 강화시킬 과제를 갖는다.

¹¹⁾ 이하의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정치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및 운영실태」(2013. 6.) 중 4~15p(독일 통신원 : 이승현)를 요약한 것이다. 원문에서는 '연방정치교육센터'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연방정치교육원'으로 표기함.

제3조

- (1) 연방정치교육원은 소장에 의해 관리된다.
- (2) 소장은 연방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연방 내무부장관은 소장의 직속 상급자이다.

제4조

소장은 모든 법률적 행위들에 있어 연방정치교육원을 대표한다.

제5조

- (1) 연방정치교육원은 정치교육의 기본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대 12명까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적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데, 이 자문위원들은 연방 내무부장관이 4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자문 위원직은 1회에 걸쳐 재임이 가능하다. 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자문위원의 임명을 제안할 수 있다. 새로운 자문위원이 임명되기 전에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2) 자문위원회는 연간 최소 2회 이상 회합을 갖는다.
- (3)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의 대리인을 선출하며 연방 내무부의 허가를 요하는 업무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 (4) 자문위원회의 회의에는 연방정치교육원을 감독하는 감독위원회의 대표자들과 연방 내무부의 대표자들이 참석할 수 있다.
- (5) 연방정치교육원의 소장은 자문위원회의 만장일치 권고사항과는 다른 내용을 결정하고자 할 때 연방 내무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 (1)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치적 균형과 정치적 영향력 행사 여부에 관해서는 <u>독일 연방의회 의원 22명으로</u> 구성된 **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 (2) <u>감독위원회의 위원들</u>은 독일 연방의회 의원단의 추천을 받아 <u>연방의회 의장</u>이 임명한다.
- (3) 연방정치교육원의 소장은 매년 감독위원회에 사전 재정소요계획, 계획보고서, 활동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소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모든 종류의 계획과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입장 표명 등을 적시에 감독위원회에 전달한다.
- (4) 연방정치교육원의 소장과 연방 내무부의 대표자는 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다.

제7조

연방정치교육원은 각 주의 관할권과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각 주의 최상급 행정청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제8조

이 규정은 2001년 1월 24일에 효력이 발생된다.

(2) 연방정치교육원의 조직 및 구성

연방정치교육원은 1952년 11월 25일에 설립되어 현재 연방 내무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됨.

- 1997년 5월 26일 '뮌헨 선언'을 통해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수행하는 정치교육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였음.
- 이러한 과제들은 「2001년 1월 24일자 연방정치교육원에 대한 규정 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의됨.
- 이 규정의 제2조는 정치교육원의 목적을 "연방정치교육원은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 의식을 확고히 하며 정치과정에 참여할 능력을 강화시킬 과제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직, 규모

- 연방정치교육원에는 2011년 말 기준으로 총 2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정식직원 158명 중 공무원 신분이 28명이며, 파트타임 근무자는 37명임.
- 감독위원회는 총 22명으로 각 정당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2011년 말 기준으로 기민당/기사당 연합 9명, 사민당 5명, 자민당 3명, 좌파당 3명, 녹색당 2명으로 구성되었음.
- 학술담당 위원회도 별도로 구성되며, 1명의 의장과 1명의 부의장및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3) 시민정치교육 운영현황

교육대상

- 독일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각 연령과 계층에 맞는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다양한 출판물과 행사를 통해 교육을 하고 있음.
- 어린이 대상 별도의 사이트 운영: 대상은 8세 ∼ 12세의 아동 http://www.hanisauland.de/

교육내용(커리큘럼, 주제, 콘텐츠 등) 등

- 연방정치교육원이 주관하는 행사의 형식으로는 학술대회, 대표자회의, 페스티벌, 메세(박람회), 전시회, 수학여행, 경연대회, 영화세미나, 문화행사, 이벤트 및 언론인 심화교육 등이 있음.
- 심포지움, 학술회의,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하며, 이러한 행사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기도 함.
-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정치학 사전 및 만화 발간, 인터넷상의 웹툰 및 만화를 활용한 시청각 자료 등이 게시되어 있음.

출판물 간행

- 3개월마다 '정치교육을 위한 정보자료집'을 발간함.
- 매주 '정치와 시사'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학문분야의 논문들과 에세이를 게재함.
- 이 잡지들은 연방정치교육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음.
-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사회학 등과 관련된 논문총서 시리즈와 논문단행본 및 통합단행본 등도 발간하며, 이러한 발간물들은 대체로 2유로에서 6유로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됨.
- 2001년 10월부터는 청소년 온라인 잡지인 '플루터(Fluter)'를 발간하며, 매월 "테마", "읽기", "필름", "시사" 등 4가지 범주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베를린에서 편집 제작되고 있음. 이 온라인 잡지는 1년에 4회 뮌헨에서 인쇄물 형태로도 발간됨. http://www.fluter.de/

승인받은 정치교육 단체들에 대한 후원

- 연방정치교육원은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기여하는 재단, 협회및 그 밖의 조직체들을 후원함.
- 매년 300개가 넘는 단체들이 후원금을 수령하는데, 후원금은 해당 단체의 회원 숫자에 따라 회원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됨

각 주별 정치교육원

- 각 주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연방 정치교육원과 같은 역할을 담당.
- 정치교육 관련 행사 및 출판물 발간을 주 업무로 함.

다. 독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

연방정치교육원은 소장-학술자문회의-감독위원회의 비교적 단순한 조직 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학술자문회의는 전문성을 기초로 소장을 보좌(지원)하여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책수립 및 자문기능, 감독위원회는 교육원의 정치적 균형과 정치적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한 감독기능, 소장은 매년 감독위원회에 재정소요계획, 계획보고서, 활동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역할 수행하는 구조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학술자문회의(연방내무장관이 위원 임명), 감독위원회(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의 구성방안도 적정한 변형을 통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각 주별 정치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을 참고한 지방자치단체(시 도)의 설치 및 운영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5. 종합: 시민교육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위한 제안 / 쟁점

이상 살펴본 3개 입법안, 개별 법률과의 관계, 독일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민교육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 또는 쟁점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¹²⁾

시민교육 법제화의 당위성(입법 목적, 입법 필요성)에 대해 국회(시민)에 대해 어떤 논리로 설명할 것인가?

- 97년 이후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시민교육 법제화 시도가 현재까지 일정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중앙 정부 차원의 입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차원의 입법(조례 등의 제정)을 통한 시민교육 법제화도 검토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민교육 담당기구의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하고 주무부처는 어디로 할 것인가?

- 시민교육의 법제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시민교육 담당기구의 조직 구성이나 주무부처에 대한 시민사회의 일관된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는가?
- 시민교육 담당기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지나치게 완결된 구조를 설정함으로써, 입법화를 위한 시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 대안: 어떤 기구나 조직의 독립성은 입법 과정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구나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인 점(예: 국가인권위원회 사례 등)을 감안하여, '법제화'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기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화를 시도하고(예컨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감독위원회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 등 검토), 입법 이후 '제도화' 과정에서 교육내용의 다양화(예: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보장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 등), 교육대상자들로부터의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시민교육 법제화의 목표와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 시민교육의 법제화의 중점을 '담당기구의 설치' 및 통일적 지원체계 구축에 둘 것인가, 아니면 시민사회 영역에서 현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교육기관, 단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둘 것인가?

¹²⁾ 이하 각 제안 및 쟁점들은 완결된 제안이나 쟁점이 아니라, 본 심포지엄의 다른 발제-토론자, 참석자들의 제안 또는 질의를 통한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다.

시민교육의 법제화와 학교교육 과정에서의 시민교육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청소년,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시민교육의 법제화와 개인 및 법인 기부 등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부의 재정 지원와에 개인, 법인기부, 시민교육을 위한 기금지원과의 연계 가능성은?

기타

제2부 다시 생각하는 시민교육

고등교육에서의 시민교육의 성찰과 과제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 대학생들의 정체성

이명원 | 문학평론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1. 회상의 시점

이 심포지엄에서 필자가 발표할 주제는 고등교육에서의 시민교육의 성찰과 과제에 대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2011년 3월에서 2014년 12월 현재까지 시민교과 교수로서 만났던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에 바쳐질 것 같다.

모든 개인적 경험이 그렇겠지만, 거기에는 얼마간의 주관성과 객관성이 뒤섞여 있는 것이기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가치중립적 객관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관적 객관성'이라는 다소는 모호한 형태의 진술이 제기될 것이라는 점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린다. 동시에 교육과정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풍경보다는, 대체로 논의하기를 꺼리는 '문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 즉 시민교육을 둘러싼 '어둠 속의 외침'을 표현하는 게 이 발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토론을 통해서 풍부하게 논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발제문은 간략하게 논점만을 제시하는 형태로 제시되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의 심포지엄 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추후에 종합하여 별도의 체계적인 논문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필자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2. '나 홀로 볼링'과 '공동체'의 비대칭성

지난 4년간 시민교육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내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이른바 '나 홀로 볼링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단자화된 학생들의 풍경이었다. 시민교육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치는 '경쟁(competition)' 사회를 감싸야만 가능한 '협력(collaboration)' 사회의 전망이다. 타자(他者)와 더불어 공 감의 정치공동체를 이룬다는 정치적 이상은 소중하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날 대부분의 학생들은 양육과 교육의 전과정에서 '무한경쟁'을 체화해 온 신자유주의 세대들이다. 이들 학생들의 부모들은 대체로 그들이 30대 초중반이었던 1997년을 전후로 해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경험했는데, 당시의 충격적 경험이 자식세대에게 일종의 불안과 공포로 내면화되어 있다. 부모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식들에 대한 교육적 투자로 보충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 이들의 자녀들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으로 교실에 나타났던 것이다.

자식세대인 이들 대학생들은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선험적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장한 세대이기에, 사회를 일종의 '정글'로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대학에서의 자기비전을 최대 '정규직'으로 갈망하는 세대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학벌주의 체제 아래서는 자신이 이른바 SKY로 구조화된 경쟁체제에서 일단 미끄러졌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과 다름없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기묘한 자기위안의 에테르 상태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는 스스로의 현재 상태를 긍정하지만, 다른 경우는 상대적 패배감도 간혹 드러내는 그런 모순적 심리상태의 학생들이 대부분의 한국 대학생들이다.

이들은 밝고 명랑하지만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자기를 개방하기를 꺼린다. 1학기 강의의 첫 시간에 자기소개를 할 때면, 학생들은 자신이 수시전형으로 들어왔다, 논술전형으로 들어왔다, 특기전형으로 들어왔다, 일반전형으로 들어왔다, 국제화 전형으로 들어왔다 식의 입시에서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소개하는 데 익숙하다. 알게 모르게 자신과 타인의 아이덴티티의 차별성을 중등교육 과정에서 체화된 계량화된 수학능력과 결부시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각각의 학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고독하다. 모둠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 학생은 시민교육 교과과정에서의 '기능적 커뮤니티'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에 반해, 일상생활에서의 '친밀성의 커뮤니티'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토크빌이 목격했던 미국 민주주의 힘이 다양한 결사체(association)로의 자발적 참여에 있었다는 것에 반해, 현재의 미국이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커뮤니티의 붕괴 상태, 즉 '나 홀로 볼링' 현상으로 전락했다는 로버트 D. 퍼트넘의 『나홀로 볼링』(페이퍼로드, 2009)에서의 절망적인 미국사회의 현재에 대한 진단은 한국의 대학생에게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바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하면서 "타자를 환대하라" "커뮤니티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만 관념 수준에서의 당위적 요구일 뿐 학생들의 심적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낯설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 성적평가가 끝나면 학생들은 교수들에게 왜 자신의 학점이 조별과정에서 전혀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은 동료들과 유사하냐 항의하면서, 모둠 내의 은폐된 갈등들과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의 현황을 폭로할 때가 종종 있다. 강의가 종강할 때쯤이면 상담할 것이 있다며, 같은 조원들에 대한 완곡하거나 노골적인 비난을 하기도 하며, 교수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여학생), 동료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

판의 욕설을 무의식적으로 발성할 때도 있다(남학생).

이것은 학생들 개인의 퍼스널리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사회의 작동원리가 '바닥으로의 경쟁'을 구조화해 낸 결과 조각해낸 새로운 인격의 가감 없는 발현일 것이다. 설사 공동체의 외형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치밀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존재방식은 고독한 단자(monad)의 상태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나홀로 볼링' 현상과 '공동체'의 비대칭성을 접착시킬 경험과 철학이 없는 한 '시민교육'이라는 극장은 공연이 끝나면, 배역을 팽개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3. 미디어 문해(media literacy)와 문제발견 능력의 부재

시민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발견능력'이다. 한동안 '문제해결능력'이 강조된 것이 교육과정의 추세였으나, 적어도 한국의 대학생들은 '문제해결능력'은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등교육 과정에서 반복 숙달 하였기 때문에, 기능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역량이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낯선 것을 발견해내거나, 인식되지 못하던 문제를 초점화·전경화하고 체계적으로 의제화하는 능력은 매우 열악하다. 이런 장면을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한 학기 동안 '자원적 현장활동'의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의 이들의 토론 장면이다

활동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정보전파력이 강한 매스 미디어나 그들의 지각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SNS에서 반복적으로 접했던 잡다한 정보들이다. 마치 죠지 오웰이 형상화해낸 '빅 브라더'나, 워쇼비츠 형제의 영화 〈메트릭스〉에서의 노이즈(noise)조차 구조화되어 설계된 프로그램의 재현과 비슷하게, 이들 학생들은 매스 미디어와 SNS에서 집중적으로 증폭된 의제와 정보들을 자신들의 활동주제로 선정하고, 이 주제에 대한 탐사와 액션플랜 역시 붕어빵을 찍어내듯 동일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이들에게 가장 결핍된 것은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검증능력과 분석 및 종합 능력이다. 말하자면 미디어에 대한 문해능력(literacy)의 결핍이 문헌자료에 대한 문해능력의 결핍과 상승작용하면서, 더 크고 넓은 디지털 시대의 '무지의 베일'=주관적 신념을 객관적 사실로 집단적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의 훈련을 문헌텍스트는 물론 미디어 텍스트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미디어에서 반복적으로 또 자극적으로 전파되는 메시지에, 이런 표현이 다소는 겸연쩍은 것일 수도 있지만,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비판적 탐구의 결과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다소 놀라운 점은 미디어를 통해 주입된 신념체계가 대체로는 그들의 아버지가 선호하는 대량미디어

의 이데올로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제발견 능력의 부재는 시민교육 과정에서의 현장에서의 경험 역시 미디어에서 재현된 정보의 재확인 차원으로 머물게 한다.

4. '사회적 약자'로서의 대학생

루소가 청년기를 '제2의 탄생'이라는 표현을 통해, 칸트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이행하는 도정으로 계몽 (enlightment)을 환기시켰던 세기와는 무관하게, 오늘의 청년들은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와 '후기 청소년'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나와 같은 중년에 이른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를 '청년'이 아닌가,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아닌가 오인하지만, 학생들은 그들 자신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빈번하게 고백한다

"우리는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라는 말을 처음에는 듣고 나 역시 많이 놀랐지만, 그런 발언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그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자기규정이었다.

실제로 오늘의 대학생들이 공론장에서 세대적으로 '과소대표' 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전 세대에 비해 집합적 의식과 결속력이 매우 미약한 세대인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이들이 객관적으로 처해 있는 미래전망은 이전 세대의 생애주기 상의 상승곡선을 생각한다면, 대체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충만해 있다. 그 불확실성의 조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직관적으로 이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취업불가능, 연애불가능, 결혼불가능이라는 3포세대의 공포에 포위되어 있는 것이다.

고교졸업자의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이 오늘의 학생들에게는 '후기 중등교육' 비슷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들이 대학에서 직면하게 되는 현실 또한 자유의 공기가 아닌 '취업준비공장'으로의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한 풍경이다.

이들이 현장활동의 현장에서 만나는 타자들 혹은 이웃들은 대체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로 규정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타자들을 시민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노숙자 저소득층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라는 식으로, 인식 자체가 비(非) 시민적 범주에서의 소외계층으로 간주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좀 기묘하기는 하지만, 그들과 같은 동료인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한국을 이해시키기 위해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학생들 자신이 그들에게서, 몰랐던 현실을 배울 수 있다는 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은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야 한다는 일차원적 도덕감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만나는 대상이 같은 시민적 주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현장활동의 과정에서 실제로는 학생들 자신이 도움

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능동적으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조력하고 지원한다고 오인한다. 시민적 주체의 다차원적 존재양식을 체험하거나 '사고실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전도가 발생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반면, 권력이나 제도 앞에서 이들은 지나치게 그 권위에 압도당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중등교육 과정에서 체화된 "가만히 있으라"라는 경향을 거슬러, 그들은 각종의 기관과 제도의 문제점을 탐사하고, 조사하고, 인터 뷰 하곤 하지만 그것의 종합된 결과로서 그들이 만들어낸 대안의 상투적인 형태는, 이런 저런 생각들을 짜깁기해 '건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권력감시'고 '정책제안'이며 '제도비판'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한다.

대학 내의 사안에 대한 취재나 조사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행정적이거나 관료적 권위에 대해 순응적이며, 관습화된 성인들의 방어적 어법이나 책임회피의 상황들 앞에서도, 지나치게 순진한 면모를 보여준다. 대학 내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개선은 엉뚱하게도 '총학생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 자신이 학생자치나 대학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를 제도개선의 통로로 이해하는 것은 학생회를 일종의 학내 권력기구의 일환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면, 타자와의 만남의 과정 속에서의 여러 형태의 발견과 통찰과 문제인식의 해결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더 크고 실효적인 권력을 가진 애초에 그들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던 제도 내지는 힘 있는 권력자로 이월되는 것을 당연시 한다. 학생들은 대표들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대표들에게 그들이 없는 전능한 힘이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기관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기관에 자신들의 건의를 들어달라는 모순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5. 정치의 회피 혹은 체념

오늘의 대학생들에게 정치는 명백한 '회피' 또는 '체념'의 대상이다. 그들은 정치를 '여의도'나 '청와대'에 존 재하는 저편의 신기루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의상으로는 시민이란 주권자이며,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그렇다면 당신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의 문제를 물으면, 한참 생각하다가 "투표를 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끝내는 것을 자주 발견한다. 4년에 한번 또는 5년에 한번 그들은 잠깐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라고 하는 게 '나'와 '너'의 관계와 소통의 기술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며, 능동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의제와 정념을 공유하는 일이라는 점 역시 생각하지 못한다. 정치적 장소가 강의실로부터 저

국가권력에 이르는 촘촘하면서도 비대칭적인 '정치들'이라는 다층적 세계라는 점을 상상해 본 적은 별로 없다. 토론과정에서 학생들은 상대 학생들의 견해가 마음에 안들면, 당신은 너무 정치적이라는 식의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정치는 일종의 감정적 반대를 위한 관용 어구로 전략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정치적 주체화에 대해 토론한다는 것이 자못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는 것을 매순간 확인한다.

독일 정치교육의 규범 격에 속하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매우 아름다운 가치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늘 의 한국의 지적 상황은 전후 독일적 상황보다는 전전 제3제국의 상황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동성과 침묵의 문화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대학은 자유의 공기가 흐르는 곳이 아니라, '정치의 회피'를 통한 안전한 자기보존의 훈련장이 되고 있다.

- 6. 법치주의와 주권재민 / 인치주의와 주권재권의 오인
- 7. 체화된 기업가 의식과 소비자 정체성
- 8. 역사적 기억의 공동화(空洞化)와 착종된 애국주의 한, 중, 일 학생의 경우
- 9. 능력주의와 결합된 차별의 정당화
- 10. 사건 / 문명의 거시적 맥락화 능력의 부족
 : 9.11테러 → 리먼브러더스 쇼크 → 3.11 후쿠시마 핵재난
 → 4.1 세월호 대참사의 의미화 문제
- 11. 공감능력의 억제, 부재, 은폐: 4.16은 그들에게 무엇이었나
- 12. 계층화된 칸막이: 상속된 학력자본·문화자본·경제자본·사회관계 자본이 교실에 미치는 영향
- 13. 소결: 그들은 왜 가만히 있나

2015 시민교육을 위한 MAP (Make, Analysis, Plan)

김미란 | 前부천시평생학습센터 소장

1. 들어가며

여기에서 MAP은 Make/Analysis/Plan의 이니셜을 딴 것으로 "필요한 역량은 Make하고(만들고), 부족한 역량은 Analysis(분석하고), 변화에 대한 Plan을 세우는(계획하는)"것을 의미한다. 서울시NPO지원센터의 NPO활동가의 핵심역량 진단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의 MAP워크숍에 대한 홍보문구에서 빌려온 표현이다. 심포지엄 제안 시, '쟁점과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발표문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토론자를 확인하는 순간부터 부담이 배로 증가했으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민교육을 위한 MAP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 위의 발표제목을 붙였다. 그러고 보니 시민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내놓아야 할 것만 같아 여러 날을 씨름하던 도중, 원고를 마감해야 할 시점에 서울시시민인권헌장, 땅콩항공리턴, 올해 수능만점을 받은 부산 대연고 이동헌군의 글 등이 SNS에서 회자되었다.

이동헌군의 글을 보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시민교육이라는 화두를 붙들고 20여년을 살고 있는 '나 또는 우리'의 '초심'이 생각났다. 항공사 부사장이라는 사람의 행위는 여러 패러디물을 쏟아내고 보는 사람들에게 쓴 웃음을 짓게 했고,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노력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주는 현실이었다. 시민교육은 이러한 현실위에 서 있다.

2013년 말 울려 퍼진 "안녕들하십니까?"에서 이미 안녕하지 못하다고 답했던 우리는, 2014년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세월호를 지켜보면서 그 아픔과 분노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했던 우리는, 과연 지금 여기에서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있을까? '당위적 차원의 필요성', '소명의식' 혹은 '강박'을 풀어놓고 시민교육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은 없는 것일까? 시민교육 혹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는 이미 제시되어 있다. 너무나 정답 같아서 재미가 없고, 추상적이어서 멀게 느껴진 그런 이야기를 내 삶 가까이로 끌어당길 수 있는 Zoom의 기능이 부족하고, 다양한 시민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풀어낼 '이야기'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시민교육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 길 찾기 앱처럼, 물어보고, 답하기가 가능하고,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어야 어느 정도 걸릴지 가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은 어쩌면 끝이 없는 길이 될지도 모르고, 공식적인 지도로는 못 찾아갈 길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박노해 시인처럼 마음의 별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2. 시민교육의 오래된 쟁점

쟁점1. 어떤 시민. 어떤 시민상을 추구할 것인가?

"시대학습,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시민이 행동하는 시민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쯤 되고 보면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도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며 '버겁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시대인식에 대해 부지런해야 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되지 말아야 하며, 불의에는 저항해야 하고, 때로는 이기적일 수도 있어야 한다. 최소한 '민폐'는 끼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참여하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 않는가? 세계화시대에는 글로벌시민이 되어야 한다.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존중과 연대'가 중요하다. 그러니 시민이 되려면 얼마나 바쁘고 힘든가?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편해지려고.

파커 J. 파머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민주주의에서 왜 마음이 중요한가'를 다루고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무엇입니다. 이런 말을 글로 옮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곤혹스러워합니다. 투표에 참여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유세에 후원을 하고, 선출된 공직자에게 어떤 쟁점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 최소한의 행동을 넘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민권의 거창한 형식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대신, 우리는 사적 영역으로 숨어들어 오로지 자신의 개인 생활을 개선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고, 거기서 생겨난 공백을 비민주주의적인 힘이 채우려고 합니다. ... 중략... 가족, 동네, 교실, 일터, 종교 공동체 또는 다른 자발적 결사체 등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의 장소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움직일 때, 우리는 지역 공동체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옹호자로서 행동하는 힘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략... 따라서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든 그 것이 살아남는데 근간이 되는 "마음의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창조적으로 긴장을 끌어안기"라고 부르는 마음의 습관 말입니다. 우리 안의 차이를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끌어안는 법을 배울 때 갈등이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엔진으로서 보다 나은 사회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런 마음의 습관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가족, 동네, 교실, 일터, 종교 공동체 또는 자발적 결사체 등에서 마음의 습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 동네, 교실, 일터, 종교 공동체 또는 자발적 결사체 등에서 마음의 습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 동네, 교실, 일터, 종교 공동체 또는 자발적 결사체 등에서 마음의 습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습

니다. 일상생활의 장소들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될 수 있는 민주적인 마음의 습관은 민주주의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구성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유지 보수되어야 민주주의가 잘 작동합니다". 파커 J.파머가 이야기 하는 다섯 가지 마음의 습관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이 안에서 모두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2) 우리는 다름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3) 우리는 생명을 북돋는 방식으로 긴장을 끌어안는 능력을 계발 해야 한다. 4) 우리는 개인적인 견해와 주체성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5) 우리는 공동체를 창조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영국의 대표적 사회혁신 단체인 The Young Foundation에서는 'The U'라고 하는 시민대학 Project를 진행하면서 재미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The U의 조사에 의하면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즉참여 핵심(civic core)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지역사회를 막론하고 5%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적극적 시민참여를 부르짖어 봤자 이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참여하는 시민의 저변이 확대되기보다는 Civic Core의 참여 강도만 더 높아질 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민 참여 및 지역사회 내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 형성이 좋은 것이라는 데에 이성적, 당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참여하기를 꺼린다. 끈끈한 이웃관계에서 기인한 과도한 간섭,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과도한 찬업을 그들은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긴 출퇴근 시간, 가족 대소사만으로도 현대인들은 이미 충분히 바쁘다. 그리고 힘들다. 지역 이슈에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직접 참여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이 인식하는 이웃은 내 이웃을 얼굴을 알고, 그 이름을 아는 정도, 조금 더 나아가 이웃집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정도라는 것이다. 이웃들로 구성된 특정 모임에 참여한다든지, 동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들을 모아 비공식 모임을 조직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관계는 그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그들이 동네상점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했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끈끈한 연대, 긴밀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약한 유대, 느슨한 연대(weak ties)가 그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한 프로그램은 단순하고 소박하다.

이러한 Weak Ties 형성을 돕기 위해 "The U"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험 중에 있다. 2010년 10월 부터 시작된 이들의 고민은 2011년 6월에서야 첫 교육 프로그램 실시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The U" 교육의 가장 기본 목적은 단순하다. 그저 참여한 학습자들이 서로 말문을 트기를, 서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각 교육은 약 90분 동안 진행된다. 그리고 재미있게 진행된다. 즉, 책상 앞에 앉아있기 보다는 활동량이 많고, 뭔가를 쓰거나 읽을 필요도 없고, 게임을 하거나, 비디오 시청을 하는 식이다. 또한, 고정된 교육 장소에서 세션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의 쇼핑몰 내 빈 공간에 팝업(pop-up) 교육 장소를 설치하는 등 학습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이러한 짧고 재미있고 이동하는 일회성 교육은 학습자의 심리적, 물리적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교육 재 시청률도 꽤 높다. 약 30% 정도가 "The U" 교육을 다시 찾는다고 한다.

교육 주제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 예는 화재, 뇌졸

중, 호흡곤란 등 응급 의료 상황에 대처하기. 특히 이런 교육은 응급 상황 대처 기술을 배울 뿐 아니라, 서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어 참여자 간 친밀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예는 시끄러운 이 웃에 대처하는 법, 길을 막고 무리 지어 지나가는 학생들의 속 내 이해하기 등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소위 'How To Talk To People(이웃들과 말문 트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지만 너무 기본적이라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스킬들에 대해 배우는 거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비법, 협상 및 설득의 기술 등 난이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 교육들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전문강사가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Volunteer들이 하루 정도 교육을 받고 Facilitator(조력/협력/촉진자)로 참여한다. 학생과 선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운다는 컨셉이고, 전문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습자 중 약 10% 정도가 Volunteer로 다시 교육에 참여한다고 한다.

지역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전형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가볍게 접근하면 좋겠다. 시민교육은 재미가 없다?, 시민교육은 돈이 안 된다?, 시민교육은 참여자를 모집하기 어렵다?, 개인적인 요구는 집단적인 요구를 앞선다?, 공동체에 대한 이슈는 너무 멀다?... 대체적으로 시민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다. 시민으로 산다는 것의 불편함, 그 불편함을 지역사회와 사회적 이슈로 연결하게 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장을 만들어간다면 어렵지도 않지 않을까?

쟁점 2. 한국판 보이텔스바흐는 가능한가?

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이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¹⁾와 같은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이끌어낸 의제21(Agenda 21)²⁾을 보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인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끌어내기 위한 교육관련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시민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는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 작은 단계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았으면 좋겠다.

^{1) 1976}년, 정치학자, 교육 관계자 등의 합의를 거쳐 시민교육(정치교육)의 공동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보이텔스바흐 합의(Beulelsbacher Konsens)'라 한다. 이 합의의 내용은 ▲교화와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현재 논쟁적인 내용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구성한다 ▲현재 정치 상황을 분석할 때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등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현재까지도 독일 시민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 독일의 시민교육은 분단 및 통일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돼 진행됐다.(출처: 서울대 저널, 기획특집 127호)

^{2) 2001}년 12월 제 57차 유엔총회에서는 보다 지속가능한 단계로 나아가는데 있어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으로 지정하는 결의안 57/254을 채택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로 알려진,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개발회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통해 '의제21(Agenda 21)」1이라는 기념비적인 결과물이 도출되었는데, '의제 21,은 인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유엔 시스템 하의 기관, 정부, 주요 조직들[비정부기구, 시민사회조직 (CSO), 네트워크]이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으로 취해야 할 실천행동의 종합계획이다.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3). 내일의 교육을 그리다_DESD 모니터링평가 2차 리포트)

3. 2015 시민교육을 위한 MAP

1) Make(만들기) - 시민교육, 판의 재구성

시민교육 주체들도 끊임없이 분화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과제를 최일선에 충실히 수행해왔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중간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는 각종 중간지원조직들이 생겨났고, 이제는 대학에서도 시민교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시민교육의 주제와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과 토론회, 워크숍, 심포지엄, 박람회 등의 형식이 있는가 하면 오픈테이블이나 자조모임, 학습모임 등도 있다. 시민교육은 시대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습형태로 이루어지도록 촉진되었으면 좋겠다.

2) Analysis(분석하기) - 시민교육 통계조사 결과

시민교육 참여율과 프로그램분석을 위해서는 시민교육에 대한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우선 파악되어야한다. 2013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³⁾은 30.2%(형식교육 3.8%, 비형식교육 28.0%), 영역별 비형식교육 참여율, 즉 평생교육의 6진 분류⁴⁾에 따른 시민참여교육은 0.9%에 불과하다. 평생교육법령이나 기타법령 근거 교육기관 및 시설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시민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민참여교육으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새로운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평생교육통계조사를 충실히 응할 필요가 있다. 2014년 현재 129개의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각 도시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통해 시민참여교육의 비중을 점차 확대한다면 총량은 늘어날 것이다.

3) Plan(계획하기) - 시민교육, 플랜 B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삶, 에너지, 안전, 돌봄,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와 평생학습 등 시민교육의 소재는

³⁾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

⁴⁾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김진화, 2009)란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나누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범주화시키는 위계적 준거 틀로,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에 대한 정의와 각 영역별 하위영역을 규정하였음. 6대 영역은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으로 구분되고(대분류), 시민참여교육은 하위영역으로 시민책무성프로그램, 시민리더역량프로그램, 시민참여활동프로그램 (중분류)으로 구분되며 각종 세부프로그램 예시(소분류)가 되어 있음

다양하다. 시민교육 관련 연구자와 현장 실천활동가들이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어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실천으로 옮겨보자.

4. 2015 시민교육에 바란다

[대안 1] 시민교육 플랫폼 만들기

요즘같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활발한 시대에 시민교육에 관한 제대로 된 온라인플랫폼 하나 없는 것도 이상하다. '00은 대학'처럼 '시민교육은 000' 이라는 플랫폼도 좋을 것이다.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발견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플랫폼은 '시민으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안 2]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뱅크(프로그램/ 강사/ 공간)를 구축하자

다양한 시민의 얼굴과 표정을 만날 수 있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디자인해야 한다. 현재 평생학습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제안프로그램이나 학습동아리지원사업은 이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의 리더양성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대해 잘 알고, 활동력이 있는 시민그룹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강사, 혹은 시민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이용 가능한 공간을 DB로 만들어 모임이나 장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뱅크를 만들어둔다면 좋을 것이다.

5. 희망의 징조

최근 들어 인문학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인문학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시민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파커J.파머는 인문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대로 실행된 인문학은 온전한 인간에 대한 관념이 시험되는 도가니다. 인문학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친다. 그 방법은 직면하게 하는 것이고, 이 영역에는 한계가 없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은 불가피하게 정치적이다. 왜? 우리의 비전을 복잡하게 만들고, 소중하게 간직해온 생각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며, 독실한 믿음을 깎아내리기 때문이다. 즉 불

확실성이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다. 관용의 경계를 긋고 다시 긋도록 강요하면서까지 우리의 이해와 연민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 구축을 통해 복합성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개인이 출현할지 모르기때문이다. 질문을 통해 형성되고 곧바로 굴복하지 않는 개인, 강제에 저항하고 모든 형태의 조직과 선동에 맞서는 개인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인문학은 우리가 민주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을 전달하는 최고의 메커니즘이다. 내가 아는 한 그보다 훌륭한 것은 없다"

고전문학평론가인 고미숙은 『몸과 인문학』이라는 책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의 용법이다. 지식과 삶은 어떻게 결합되는가? 앎과 삶의 일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학교에서는 바로 이 용법을 익혀야 한다. 윤리적 덕목으로 말하면, 우정과 연대가 그것이다. 문명의 동력은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란 타자와의 마주침이다. 학교란 무엇인가? 처음으로 혈연을 떠나 타자들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곳이다. 타자를 통해 세계와 우주라는 매트릭스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배움이다. 따라서 우정과 배움은 분리될 수 없다. 우정이란 사람을 좋아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지식과 삶의 능동적 교감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른다. 우정이 타자와의 접속이라면 지혜는 자기에 대한 탐구다. 앎은 공기나 물과 같다. 공기에는 경계가 없고 물은 오직 흐를 뿐이다. 앎 또한 그러하다. 앎은 순환해야 하고, 순환하지 않으면 앎이 아니다. 우정과 지혜는 그 순환의 최고 기술이다.

조한혜정교수는 2007년에 『다시 마을이다 – 위험사회에서 살아남기』를 통해 '선진국 따라잡기'에 급급한 개발 국가의 '국민'으로서 숨 가쁘지 않게 지낸 적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의 탈선을 지켜보며 불안이 영혼을 잠식하는 재난 사회가 오고 있음을 감지하면서 마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2014년 10월 자공공⁵⁾을 통해 우정과환대의 마을살이의 가능성과 희망을 지구살이, 마을살이, 세대살이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의 대거당선은 학교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하고, 특히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co-work은 시민교육의 지평확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2014.1.9. 제정, 시행)에 따른 정책사업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4. 11, 20일 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혁신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다.

아울러 평생교육계에서 시민교육을 연구하는 모임도 생겨나고 있고, 지자체의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서도 시민교육 워크숍이나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용에 탑재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얼마나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정치 제도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이를 정책사업으로 만들어내고, 구체적인 현장단위에서 실천하는 노력들이 어우러진다면 시민교육은 한 걸음 더 진전할 것이다.

⁵⁾ 조한혜정(2014). 자공공.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여기서 자공공은 자조, 공조, 공조의 앞 이니셜을 딴 것이다. 자조: 自助 스스로 돕고, 공조:共助 서로를 도우면서, 공조:公助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 가자는 뜻임

〈참고문헌〉

단행본

고미숙(2013). 몸과 인문학. 북드라망 조한혜정(2014). 자공공.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파커J.파머(2012).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글항아리

연구보고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시민교육위원회(2005). 시민교육 제도화를 통한 21세기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방안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3). 내일의 교육을 그리다 DESD모니터링평가 2차 리포트

인터넷검색자료

서울대저널기획특집(127호) 수원시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생활 속에서 참모습을 드러내는 곳.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더불어 사는 삶의 힘으로 살아나는 곳.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는 바로 그 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01년 7월 24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법률 제6495호)에 의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 1. 쉼 없이 나아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꿈이 실현되는 곳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 민주화운동기념역사관, 민주시민교육센터, 국제민주센터, 민주주의 연구소, 민주화운동사료관, 민주주의 테마공원 등으로 구성
- 2.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는 반복된다 **기념사업**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모행사 개최·지원, 민주화운동 문화 콘텐츠 수집, 개발, 보급, 민주화운동 기념·계승단체와 협력사업 등
- 3. 더 많은 시선, 더 넓은 연대 **국제협력** 각국의 민주주의 경험과 정보 공유, 상호 방문 프로그램, 서울민주주의 포럼 진행 등
- 4.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민주시민교육 조사 · 연구, 각급 학교를 위한 단계별 기본 교육자료 개발, 교사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민주주의 현장체험 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가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 지원 사업 등
- 5. 조사 · 연구를 통한 민주주의 역사의 현재화, 미래화 학술연구민주화운동사 · 민주주의 조사 · 연구, 연구 지원, 학술지 발간, 국제 학술 교류 · 협력사업 등
- 6. 기억의 역사를 기록의 역사로 **사료관** 민주화운동관련 사료 수집. 구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료 온라인 서비스 등

21세기 인성교육의 산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합니다

경희대학교는 2011년도부터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설립해 한층 강화된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육은 학부교육의 지속적 혁신을 통해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려는 경희대학교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1세기 교양교육의 전범이 되고자 하는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육의 목표는 탁월한 개인, 책임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의 양성입니다. 이를 위한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육의 구체적인 지향점은 탐구 활동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합리적 설명의 능력인 과학적 사고, 공감의 공동체 가치를 인지하는 봉사정신, 지구사회의 공통문제를 풀 수 있는 세계시민적 역량 그리고 사회적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적 능력의 함양입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육 프로그램

인간의 발견, 문명의 전환

중핵교과 〈인간의 가치탐색〉과 〈우리가 사는 세계〉를 통해 인간, 역사, 문명을 바라보는 총체적 안목을 갖춰 나갑니다.

세상이 곧 강의실. 시민교육

대학 최초로 실시되는 시민교육은 세상을 강의실로 바꿉니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삶의 현장에서 대안을 모색합니다.

나를 위한. 세상을 위한 글쓰기

글쓰기 교과는 성찰적 · 학술적 · 사회적 글쓰기를 아우릅니다. 강좌 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해 섬세한 첨삭 · 상담 지도를 합니다.

몸에서 우주까지, 다양한 융복합 교과

생명. 우주. 의미, 사회. 평화. 역사. 수량세계 등 7개 주제영역을 탐구합니다.

지성과 감성의 조화, 예체능 교과

시창작, 합창, 기타연주, 스포츠 댄스, 전통 무예, 요트 등 다양한 예술·체육 교과를 통해 감성을 키우고 새로운 지성을 창조합니다



(사)시민은 지속가능한 시민운동,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 2013년 2월 창립한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사)시민의 주요 역할

시민사회단체와 공익적 시민활동의 경험과 자원을 나누는 플랫폼

- ▶소통과 협력을 위한 포럼 개최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상생토크
- ▶시민사회와 각계의 다양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 : 분야별 워킹그룹 운영
-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실험 공유
- ▶ 시민사회의 다양한 중간조직 네트워크

서울NPO지원센터 위탁 운영

-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및 공익적 시민활동의 성장을 돕는 마중물
- ▶ 시민운동가 및 공익활동시민 교육과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 ▶ 시민운동가 교류 · 연수 · 휴식 프로그램 개발 : 시민 펠로우 선정 및 지원
- ▶ 시민운동가 직무개발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씽크넷

-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 연구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책제안
- ▶ 시민사회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 축적
- ▶ 시민사회 관련 연구자 교류 허브

2014년 시민교육 포럼 연혁

2014

1차 시민교육 포럼

일시 2014년 4월 22일(화) 오후 3시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주제 달라진 세대. 달라진 시민교육 – 20대가 바라본 시민교육

발표자 한숭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민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동주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시민

2014

2차 시민교육 포럼

일시 2014년 7월 16일(수) 오후 3시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민주누리

주제 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시민을 위한 교육

발표자 사회: 박영선(사)시민이사

발제: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배문정 우석대학교 교수

염경미 세마중학교 교사

곽봉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정현곤 (사)시민 운영위원장

공동주최 경기도교육연구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시민





